

저출산 추이와 파급효과

- 우리나라의 저출산현상은 다른 국가와 달리, 출산율이 단기간에 아주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됨

- 이러한 초저출산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므로, 조기에 출산율 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1. 저출산 추이

□ 우리나라 출산율(이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83년 2.08명, 2008년 1.19명으로 급격하게 감소

□ OECD국가들 대부분은 출산율이 인구대치수준 이하로 낮아진 이후 장기적으로 1.5명 이상의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초단기간에 고출산에서 저출산으로 급격한 이행을 경험

○ 특히,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OECD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1.5명 이하로 낮아진 적이 없으며, 합계출산율이 1.2명 수준까지 낮아진 중남부 유럽 국가들과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단기간 현상에 그침

· 그 결과, OECD국가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2000년 1.60명을 저점으로 2007년 1.73명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유럽국가들의 출산율 증가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속도효과(timing effect 또는 tempo effect)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가 존재하지 않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즉,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일단 낮아지면, 다시 반등 없이 그 수준이 지속되거나 더 낮아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표 1] OECD 주요국의 출산율 변동추이

연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독일	OECD
1970	4.53	2.14	2.48	2.44	2.48	1.92	2.03	2.71
1990	1.59	1.54	2.08	1.83	1.78	2.13	1.45	1.86
2000	1.47	1.36	2.06	1.64	1.87	1.54	1.38	1.64
2005	1.08	1.26	2.05	1.79	1.92	1.77	1.34	1.62
2006	1.12	1.32	2.10	1.84	1.98	1.85	1.33	1.65
2007	1.25	1.34	-	1.90	1.98	1.88	1.34	1.73
2008	1.19	1.37	-	-	2.00	1.91	1.37	-
2009	1.15	-	-	-	-	-	-	-
최저수준	1.08	1.26	1.74	1.63	1.66	1.50	1.33	1.60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 저출산현상의 파급효과

가. 인구학적 파급효과

□ 인구규모 감소 가속화

- 초저출현상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장래 인구는 필연적으로 급격하게 감소
 - 총인구는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2050년 4,234만명(700만명 감소)으로 전망(2006년, 통계청)
 - 2020~2030년간 69만명, 2030~2040년간 229만명, 2040~2050년 400만명 각각 감소
 - 가임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총인구는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100년 2,120만명으로 전망('07년, 보사연)
 - 2050~2200년간 2,114만명 감소(2300년 140만명 수준, UN)

□ 생산가능인구 급감과 노인인구 급증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619만명을 정점으로, 2050년 2,242만명, 2100년 944만명(1/4 수준)까지 감소
- 노인인구(65세 이상)는 2008년 5백만명(2010년 536만명)에서 2018년 7백만명, 2030년 1181만명, 2050년 1,616만명으로 급증 전망(2026년 1,000만명, 2040년 1,500만명 초과 전망)
 - 특히, 2013년부터 새로운 노인인구가 출생아수 상회 시작(출생아수 418만명, 노인 441만명)
 - 2016년에는 유소년인구(654만명)가 노인인구(659만명)보다 적어지는 '인구역전현상' 발생

[표 2]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변동

(단위: 천명, %)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50년
총인구	48,875	49,277	49,326	49,108	48,635	47,734	46,343	44,521	42,343
유소년인구(15세미만)	7,907	6,733	6,118	5,778	5,525	5,231	4,777	4,220	3,763
생산가능인구(15-64세)	35,611	36,163	35,506	33,562	31,299	28,954	26,525	24,503	22,424
노년인구(65세이상)	5,357	6,381	7,701	9,768	11,811	13,549	15,041	15,798	16,15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소년인구(15세미만)	16.2	13.7	12.4	11.8	11.4	11.0	10.3	9.5	8.9
생산가능인구(15-64세)	72.9	73.4	72.0	68.3	64.4	60.7	57.2	55.0	53.0
노년인구(65세이상)	11.0	12.9	15.6	19.9	24.3	28.4	32.5	35.5	38.2
총부양비	37.2	36.3	38.9	46.3	55.4	64.9	74.7	81.7	88.8
유년부양비	22.2	18.6	17.2	17.2	17.7	18.1	18.0	17.2	16.8
노년부양비	15.0	17.6	21.7	29.1	37.7	46.8	56.7	64.5	72.0
잠재적부양비	6.6	5.7	4.6	3.4	2.6	2.1	1.8	1.6	1.4

자료: 통계청, KOSIS

□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

- 인구고령화 수준(65세 노인비율)은 2050년 38.2%, 2100년 46.9%로 급상승(2040년 전후 세계 최고령국가 전망)
 - 고령화사회(노인비율 7%)에서 고령사회(노인비율 14%)로 이행하는데 18년(2000→2018) 소요
 - 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일본 24년에 비해 빠르게 진행
 - 2026년 초고령사회(노인비율 20%)로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8년 소요
 - 프랑스 40년, 이태리 20년, 미국 16년 등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
- 2005년 7.9명이 부양하던 노인 1명을 2050년 1.4명, 2100년 1.1명이 부양하게 되어 세대 간 갈등 예상

[표 3]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국 가	특정 노인비율 도달연도			소요기간(년)	
	7%	14%	20%	7%→14%	14%→20%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독 일	1932	1972	2010	40	38
이태리	1927	1988	2008	61	20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나. 경제적 파급효과

□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저출산·고령화로 저축률이 하락하면서 자본스톡 증가율이 2006~2010년 기간 중 연평균 5.8%에서 2041~2050년 1.6%로 둔화 감소(KDI, 2007)
- 최근의 저출산현상이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의 실질GDP 성장률은 2006~2010년 기간 중 연평균 4.8%에서 2041~2050년 1.2%로 둔화, 그 이후 2075년까지 0.7~0.9%(1.4~1.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KDI, 2007)
 - 특히 2020년 이후 2050년까지 GDP 증가율은 취업자 증가율의 감소세 전환, 피부양인구 비율의 빠른 상승 등 고령화 효과로 인하여 비교적 빠른 속도로 둔화

[표 4] 실질GDP 성장률 전망

(단위: 증가율, %)

연도	1,25	1,6	1,23	1,6	TFP
2006~2010	5.8	5.8	4.8	4.8	1.4
2011~2020	5.4	5.3	4.1	4.0	1.3
2021~2030	4.0	3.8	2.8	2.7	1.2
2031~2040	2.5	2.5	1.7	2.0	1.2
2041~2050	1.6	1.9	1.2	1.6	1.2
2051~2060	1.3	1.7	0.9	1.4	1.2
2061~2075	1.0	1.7	0.7	1.5	1.2

자료: 한진희 외(2007), 『국민연금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변수 전망: 2006~2080』, 한국개발연구원

□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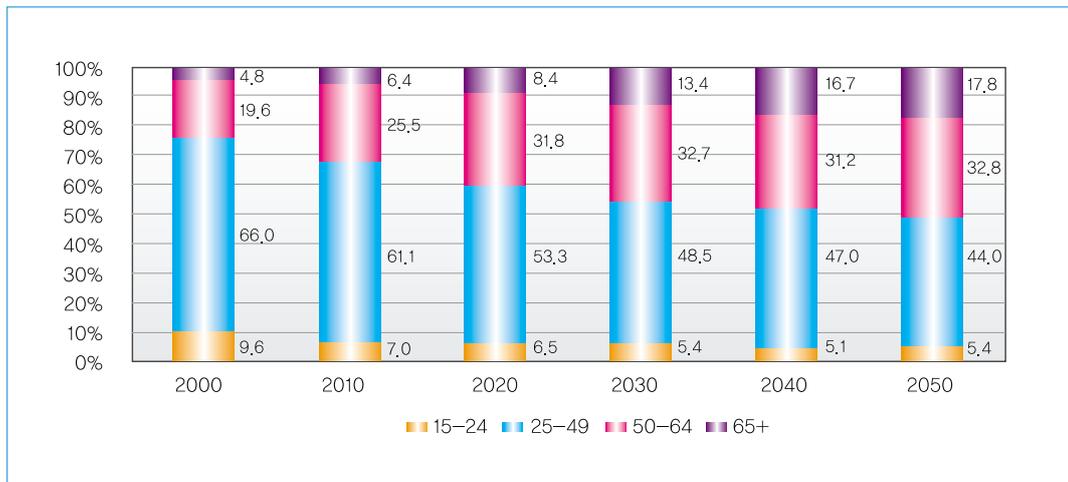
○노동력 감소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을 정점(3,619만명, 총인구의 73.4%)으로 감소, 핵심근로계층(25~49세)은 2007년(2,06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에 이미 합계출산율이 1.6 수준 대에 접어든 결과, 20년 후인 2000년부터 젊은층 노동력의 감소가 시작되었으며, 2002년 이후 1.2 이하 수준으로 낮아진 출산율의 효과는 2020년 이후 경에 본격적으로 나타날(누적적) 것으로 전망

○노동력 고령화

- 2000년 현재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약 25%미만인데 비해 2050년에는 그 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핵심 노동력(25~49세)의 취업자 비중은 2000년 66%에서 2050년에는 44%로 줄어들 전망
 - 특히, 5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00년 12.2%, 2020년 23.3%, 2040년 28.9%로 증가 전망
-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2005년 38.5세에서 2010년 39.7세, 2015년 40.9세, 2020년 42.3세, 2040년 44.1세로 증가

[그림 1] 한국 노동력의 고령화 전망: 2000-2050



자료: 한국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전망 2000-2050; OECD(2002)

○노동생산성

-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을 통제할 경우, 55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1%p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은 0.09~0.17% 감소 추정(KDI, 2006)¹⁾
- 노동인구고령화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1.8%에서 2040년대 1.1%로 감소 전망

1) 문형표 외, 『인구조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한국개발연구원, 2006

□ 재정에 미치는 영향

-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세입기반인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여 연금, 의료비 등 복지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사회보장 재정부담 가중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시뮬레이션(국회예산정책처, 2009. 9) 결과, 2020년 보건의료 및 교육 등 사회보장지출 확대에 총지출은 37% 증가하는 반면, 총세입은 15%만 증가하여 재정수지는 35조원 악화될 것으로 전망
-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도입되어 있는 복지제도에서 공적연금, 공적의료, 노인복지, 기초생보 등의 지출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임
 - 향후 국민연금 지출의 GDP대비 비중은 현재 1% 미만에서 2050년에 6%대로 상승 전망
 - 기타 공적연금지출(1%미만→2%대), 기초노령연금(0.4%→3%대), 건강보험지출(2.87%→4.6~5.5%), 장기요양보험(0.27%→0.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지출 0.25%→0.4% 이상, 의료급여지출 0.28%→0.6% 이상) 전망
- 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이며, 재정상태를 안정화하고자 한다면 조세부담(국민부담)의 대폭 증가가 불가피할 것임
 - 조세부담률은 2050년까지 현재보다 약 4~5%p, 혹은 20~25% 정도 상향조정 필요
 - 국민부담률도 2050년까지는 현재보다 약 6~7%p, 혹은 22~26% 내외 정도 상향조정
 - 인구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일인당 조세부담을 2008년의 소득수준 및 실제 조세부담 기준으로 산정하면, 일인당 조세부담은 2050년에는 현재보다 85~106만원, 일인당 국민부담은 현재보다 130~150만원 정도 상향조정

다. 사회적 파급효과

□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사회보장비 등 복지부담 급증 등으로 인하여 세대간 갈등 초래 우려

-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규모 축소로 이어져,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사회보장 재정부담 급증 불가피
 -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의 재정지출 규모는 2008년 GDP대비 4.0%에서 2030년 GDP대비 11.8%로 크게 증가할 전망 (KDI, 2005)

□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 저출산의 영향으로 2055년 국민연금 가입자수가 수급자수보다 적어질 전망
-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수)는 2008년에 10.3%이나, 제도가 성숙하고 인구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5년 119.7%로 최고점에 이른 이후 다소 감소(가입자 100명당 수급자는 120명인 상황)
 - 2044년부터 당년도 수직적자 발생(지출이 총수입 초과) 및 2060년 적립기금 소진(2043년 2,465조원 정점 후)
- 2060년 보험료수입은 총지출의 39% 수준에 불과하여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이나 대규모의 국고보조 불가피(이 경우 재정수지 악화)
 - 재정안정을 위한 필요보험료율은 12.5%~17.5% 인상 불가피(현재 보험료율은 9%)

[표 5] 재정수지전망(기본가정)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연말)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¹⁾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05년 불변가액)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0	325,294	50,851	27,629	23,222	10,328	9,852	40,523	27.6	9.00	282,798
2015	575,098	75,710	39,147	36,562	17,623	17,283	58,087	29.3	9.00	437,613
2020	923,985	109,949	53,421	56,528	31,818	31,364	78,131	26.6	9.00	624,472
2025	1,304,447	135,363	69,007	66,356	55,202	54,614	80,161	22.2	9.00	798,498
2030	1,738,946	176,064	87,150	88,913	86,287	85,525	89,777	19.1	9.00	964,123
2035	2,131,048	204,311	105,365	98,946	129,556	128,588	74,755	15.9	9.00	1,070,136
2040	2,413,567	240,844	127,764	113,080	198,670	197,440	42,174	11.9	9.00	1,097,752
2044	2,459,151	257,173	145,974	111,198	262,529	261,057	-5,356	9.4	9.00	1,033,307
2045	2,440,482	262,100	151,441	110,659	280,770	279,230	-18,669	8.8	9.00	1,005,355
2050	2,110,154	278,988	181,417	97,571	377,879	375,952	-98,891	5.8	9.00	787,331
2055	1,286,378	265,034	205,048	59,986	475,969	473,567	-210,935	3.1	9.00	434,721
2060	-214,225	231,684	231,684	0	596,793	593,799	-365,108	0.3	9.00	-65,571
2065	-	266,860	266,860	0	725,918	722,188	-459,058	-	9.00	-
2070	-	308,703	308,703	0	843,119	838,471	-534,416	-	9.00	-
2075	-	356,299	356,299	0	963,934	958,141	-607,635	-	9.00	-

주: 1)적립배율은 연간 총지출 대비 연초적립기금비율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및 운영개선방향』, 2008. 11

□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 보험료를 지불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수와 건강보험의 수혜를 받는 적용인구수 차이가 매년 벌어져 향후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 가중 불가피
 - 적용인구수-가입자수 차이는 2011년 872만명에서 2030년 1,071만명으로 증가
- 저출산 · 고령화로 전체 보험료 수입에 비해 보험급여 지출이 더 커져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위험도가 증가
 - 보험료 적자가 2011년 9.3조원에서 2030년 37.2조원으로 급격 증가하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 누적적자는 2030년 317조원으로 추정
- 당기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 불가피하며, 이는 국민 부담 가중
 - 2017년에 당기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매년 8% 인상 불가피(수가 3% 인상 가정) (현재 직장+개인 보험료율 5.08%)

[표 6] 수입 및 지출 증가율 전망(2011~2030년)

(단위: 억원)

연도	전체수입	증가율	전체지출	증가율	당기수지
2011	314,254	-	364,039	-	-49,785
2015	379,026	4.81%	476,831	6.47%	-97,805
2020	480,279	4.90%	630,244	5.42%	-149,965
2025	598,736	4.52%	807,259	4.91%	-208,522
2030	745,570	4.32%	1,020,540	4.79%	-274,970

□ 교육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령인구 2009년 346만명에서 2020년 251만명(95만명 감소), 중학교령인구 409만명에서 266만명(143만명 감소), 대학학령인구 251만명에서 227만명(24만명)으로 각각 감소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분야에 지대한 영향 불가피

- 신생아수가 적은 지역에서 학교통폐합이 불가피하나, 지역중심 교육의 중요성 무시 등에 따른 폐단 발생 우려
- 교원 수요 감소로 교원수급조정 필요
- 대학의 미충원을 증가로 대학의 슬림화(대학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및 그로 인한 내실 있는 고등교육 지장

□ 국방에 미치는 영향

- 출산을 감소는 청년인력 감소현상을 유발하여 병역수행가용자원의 감소 초래
- 현역가용자원은 2010년 32만명에서 2020년 29만명(2010년 규모의 93%), 2025년 21만명(2010년도 규모의 66% 수준)으로 감소 전망
-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복무기간 단축이 요구되나, 한편으로 국방자원의 감소로 군복무기간 연장 필요
 - 향후 첨단무기 전력화로 전문화된 운용요원이 주축이 되어 국방인력 소요가 줄어들지라도(소수인력 정예화), 국방에 일정한 수준의 병력 유지는 필수 불가결

[표 7] 현역가용자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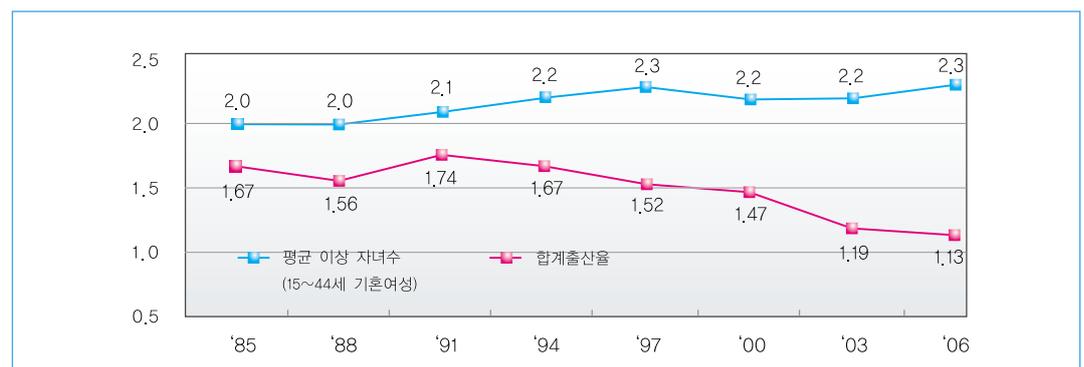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50년
현역가용자원(만명)	32	34	29	21	20	19	18	17	16
(2010=100)100	100	107	93	66	64	59	55	54	51

주: 현역가용자원은 20세 현역처분율 86.1%, 19세 입영희망 8.4% 적용('08 ~ '11년), '06년 이월자원 4.5만명 포함
 자료: 재정경제부 · 교육인적자원부 · 국방부 · 보건복지부 · 노동부 · 기획예산처,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 2007

□ 가족 및 개인에 미치는 영향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가족분화가 더욱 촉진되며, 특히 노인부부 및 노인단독 가구 증가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의 사적부양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전 세계적으로 혈연에 기반한 가족 간 상호부양체제에서 공적연금 등을 통한 세대 간 사회적 부양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나, 한국은 사회보장재정의 한계와 공공인프라 확충의 제한으로 가족의 노인부양 역할을 전적으로 사회화하는 데에는 한계 존재하여, 후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 농후
- 저출산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조차 어렵게 하는 사회 · 문화 · 경제적 여건 속에서 일종의 '강제된 선택'의 결과
 - 한국 여성들은 평균 2.3명의 자녀를 두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합계출산율이 1.0명에 근접하는 저조한 추이

[그림 2] 평균 희망 자녀수와 합계출산율 비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각 년도

3. 정책적 함의

- 저출산현상의 파급효과는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므로, 선제적 투자로서 현 추이를 변경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한 포괄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정부가 국민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전달함으로써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 제고 필요
 -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전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제도화
 - 출산 · 육아를 소비적 행위가 아닌 사회적 인적자본(social human capital)형성을 위한 투자과정(investment)으로 보고 적정 수준의 국가적 · 사회적인 자원투입을 일상화
 - 저출산의 파급효과는 사회 모든 부문에 엄청난 파국과 변화를 초래하므로, 먼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지도자의 깊은 관심과 예산배분 등 뒷받침 필요
 - 프랑스의 경우, 출산장려정책을 역대 지도자들이 좌우파를 막론하고 국가의 최우선과제로 추진
 -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소요하는 경우, 국민부담이 증가할 것이나 비예산사업만으로는 한계성 존재(일본의 예)
 - 실효성 있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획기적 확충과 안정적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인 바, 중장기 재정운용의 핵심과제화 필요
 - 프랑스: 가족(자녀 출산장려 및 육아 등)에 대한 지원이 GDP의 3.8%(2005년)
 - 우리나라 저출산대책(2008년) : GDP의 0.4%(3.8조원)
- 지금까지의 저출산대책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 전환 모색 필요
 - 출산율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핵심정책들에 대해서는 정책대상 확대
 -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저출산대책 각각의 수준 향상
 - 예로, 급여 현실화, 맞춤형 고질의 서비스 개발 및 제공 등
 - 정책 전달체계 개선 및 정책 간 연계성 강화
 - 예로, 보육정책-일 · 가정양립정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함
 - 정부 홀로의 노력보다 다양한 사회주체의 적극적인 참여 도모
 - 예로, 일-가정양립 제고를 위해 직장(기업 등)의 적극적인 동참 유도
 - 필요조건(보육, 일 · 가정양립, 자녀양육비용부담 경감 등)과 충분조건(가치관 변화)의 정책들이 조화를 이루어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정책 간 조화를 최적화

이삼식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연구위원) 문의 (02-380-822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